

실내외 행사 가능...공연장·경로당 문연다

광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행정조치 해제·기준 완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광주시가 3일부터 1단계로 완화한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에서 지난 6월 27일 광복사와 금양오피스텔 발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광주시는 곧바로 지난달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광주사당교회, 일곡중앙교회, 광주고시학원, 배드민턴 동호회로 이어지는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 확산했고, 광주시는 각종 행정조치와 방역 등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지역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감염원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1단계 전환에 따라 각종 행정조치가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됐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실내외 행사 개최가 가능해졌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은 좌석 수의 30% 이내,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공연마루 등 공연장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입장객을 제한해



2일 오후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운영한다. 지역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경로당은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식사는 금지되고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 등 비접촉을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고, 종사자들의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 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판매업무를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된다. 다만,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4㎡당 1명으로서 인원도 제한된다.

감염 연결고리 중 하나로 꼽혔던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는 별도 해제 시

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대학 운영 체육관과 실내체육 시설도 3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 체육활동 및 실내 집단운동도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고,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유지해 QR코드 사용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복사와 광주사당교회, 일곡중앙교회는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다른 종교시설처럼 집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시가 별도로 지정했던 9개의 고위험시설은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당분간 행정조

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방학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유지한다. 감염 위험이 큰 지하 소세벌티방과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감염병이 상존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대비해 방역 수칙 준수와 일상 및 경제 활동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19 신규확진 감소세 2주간 일일 평균 16.9명

정부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방역관리 또한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일부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1일까지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9명으로, 이전 2주(7.5~18)의 21.4명보다 4.5명 줄었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난 1주일간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인 9.9명이었다. /연합뉴스

전남도, 긴급복지 지원 기준 연말까지 완화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재산 기준...예술인들도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을 겪은 저소득 위기가구 등을 위해 지원 조건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도민 가운데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를 통해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연말까지 완화된 내용은 주로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1억1800만원에서 2억원까

지,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상향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65%에서 150%로 확대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비롯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중소도시 42만2000원, 농어촌 24만3000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행사·공연·전시가 취소 및 연기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긴급 복지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비비로 1200명분 모두 6억원을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6월말 기준 전남도내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지역고용유대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차로 8월까지 지급하며, 율하반기 추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게 될 예술인을 감안해 12월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7월말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남도내 예술인은 1046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 2.68%↑...의료급여는 195만원 이하 지급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00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1인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득이 46만원인 4인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95만51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상한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19만4331원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48만원, 경기·인천(2급지) 37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9만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3000원이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3만8145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된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기업' 자산 11일부터 현금화 절차 日 관방장관 "모든 대응책 검토"...비자제한·관세 인상 거론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을 거듭 시사하고 있어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한 대주지분 포함지원의 압류명령이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에 전달(공시발령) 될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자산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일본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라 일본 정부

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는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주한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도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더 나빠지면 양국 모두 부담이 커지는만큼 현금화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고흥군 공고 제2020-1273호

고흥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관련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안) 주민설명회 개최재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3일
고 흥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흥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위 치 : 고흥군 관내 362개 소하천(연장 약 463,563km)
• 사업시행처 : 고흥군
• 승 인 권 자 : 전라남도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20.08.03~2020.09.02(22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고흥군청(재난안전과) 고흥군 관내 읍·면사무소 (고흥읍, 도암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도화면, 동일면, 봉래면, 포두면, 정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장면)
정보통신망	고흥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ae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일시	장소	일시
고흥읍사무소	2020.08.11.(화), 10:00	도화면사무소	2020.08.11.(화), 10:00
도암읍사무소	2020.08.11.(화), 14:00	동일면사무소	2020.08.11.(화), 14:00
풍양면사무소	2020.08.11.(화), 16:00	봉래면사무소	2020.08.11.(화), 16:00
도덕면사무소	2020.08.12.(수), 10:00	포두면사무소	2020.08.12.(수), 10:00
금산면사무소	2020.08.12.(수), 14:00	정암면사무소	2020.08.12.(수), 14:00
동강면사무소	2020.08.12.(수), 16:00	영남면사무소	2020.08.12.(수), 16:00
대서면사무소	2020.08.13.(목), 10:00	과역면사무소	2020.08.13.(목), 10:00
두원면사무소	2020.08.13.(목), 14:00	남장면사무소	2020.08.13.(목), 14:00

4.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장소
• 대상 및 제출내용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으로서 계획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 출 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재난안전과(☎ 061-830-5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공고 제2020-586호

장흥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장흥군 내역을 원거리 197번지 일원 대덕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공조장을 위하여 근린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3.
장 흥 군 수

1. 공람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가. 위 치 : 장흥군 내역을 원거리 197번지 일원 (대덕중학교)
나. 내 용 : ① 근거리시설 결정(변경)(안)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대덕중학교)
 * 면적 : 16,200㎡ → 변경 : 19,833㎡, 층고: 6,330㎡

2. 주민공람 내용 및 열람장소
가. 공람내용 : 공람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안)
 * 관계도서 : 재정생태(공람장소에 비치)
나. 공람기간 : 2020. 8. 3. ~ 2020. 8. 18.(15일간)
다. 열람장소 : 장흥군청(건설도시과), 전라남도교육청(시설과)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전라남도교육청(시설과), 장흥군청(건설도시과)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청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061-860-6141)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감소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0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2,875,000,000원 중 금1,875,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1,00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 최우익이 1,761,000주, 주주 김영환 1,308,000주, 주주 임세진 605,000주, 주주 김봉수 76,000주, 를 감소하여 무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0. 8. 3.
엘엠이티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동산단6호 71 (월전동) 대표이사 최우익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묘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묘조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함.

1. 분묘의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광동동 산285-1
2. 분묘의 개수 : 2기
3. 개장방법 : 공묘조인 경우 관세법령에 의거 공묘조인 임의개장
 - 유언분묘 : 공묘조인 경우 유언장 확인서 연고자와 협의개장
4. 개장시점 : 개장시점 후 건축물 건축
5. 공고기간 :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인차장소 : 전남 광양군 광양읍 신기리 산167-1 광혜문화묘지
7. 인차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고 처 : 010-6515-7016
9. 신고서 기재사항 :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 계약등본,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분묘법령에 위반하여 추가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에 포함함.

2020년 8월 3일
공묘인 (우) 정영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교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약구독 220-0550

본명 조영진

서울에서 스쿠알렌 사업 했을 때 이름 김홍삼

내 돈 같아요 안감면 고소할 거예요

신은선 010-3305-9974

산행안내

8월4일(토)
▲광주호산회 8월4일(토) 비금도 선원산 도초도 수국제,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5:5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 후문 06:2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11일(토)
▲광주호산회 8월11일(토) 순창 송대불 체계산, 구름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18일(토)
▲광주호산회 8월18일(토) 지리산 의신옛길(사산대사지), 대성골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